

Beyond GDP와 국민이전계정

배수진
경제통계기획과 주무관
baesj82@korea.kr

김지현
경제통계기획과 주무관
jhkim0353@korea.kr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
/경제학박사
nhui@kihasa.re.kr

시장경제 산출물로 계산되는 GDP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 · 경제 · 환경 전 측면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로 GDP를 보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Beyond GDP 측정의 일환으로, 국민이전계정 · 가계생산위성계정 · 국민시간이전계정을 개발, 공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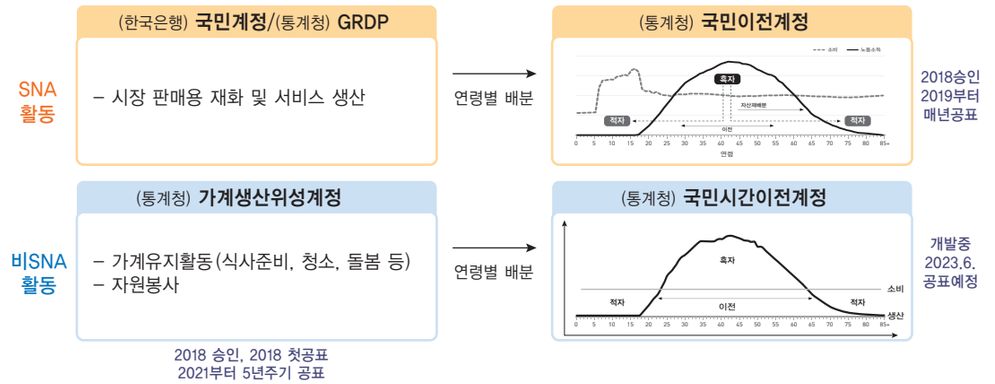
특히 이 글에서는 GDP 측정의 기초자료인 경제통계에 인구통계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현행 거시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발된 국민이전계정을 살펴본다. 국민이전계정은 세대 간 경제를 이해하고자 작성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국민이전계정 2010~2020년 결과를 분석하고, 인구 구조와 그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통계의 의미를 소개한다. 고령화와 함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이전계정의 분석 결과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GDP를 넘어

"GDP를 넘어선 계량적 웰빙 측정 통계 개발"

- 시장경제 산출물로 계산되는 GDP의 한계를 넘어서,[1] 사회 · 경제 · 환경 전 측면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웰빙 지표들로 GDP를 보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 이에 통계청에서는 Beyond GDP 측정의 일환으로 경제통계에 인구통계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국민이전계정, 가계생산위성계정, 국민시간이전계정을 개발 · 공표하고 있다.
-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 생산범위에 포함되는 연령별 경제적 자원 흐름 분포를 나타내는 통계이며, 2019년부터 매년 승인통계로 공표한다. 가계생산위성계성은 국민계정 생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음식준비, 자녀 돌보기 등)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한 통계이며, 2018년부터 5년 주기 승인통계로 공표한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연령별 분포로 나타내는 통계로 현재 개발 중이며, 2023년 6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그림 1] 통계청 위성계정* 작성 현황



주: * 위성계정: 국민계정 중심체계와 정합성은 있지만, 완전히 통합되기 어려운 특정 분야를 다루거나 특별 관심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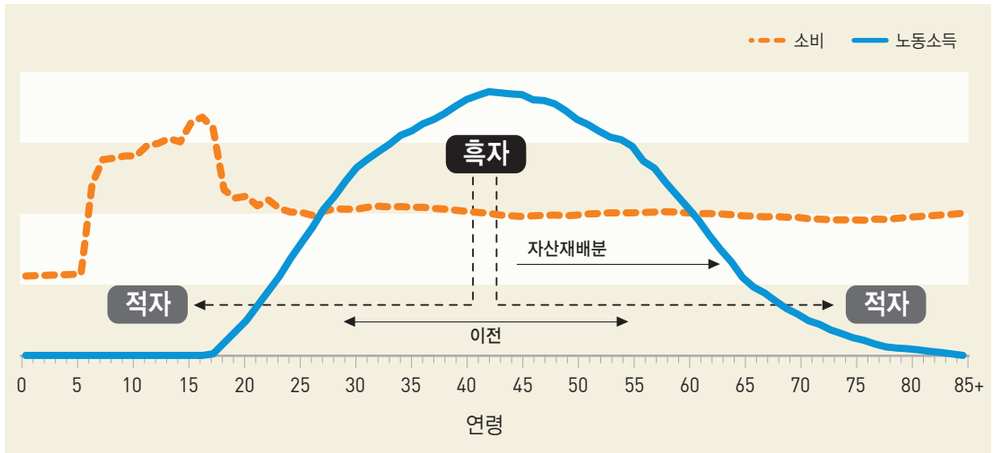
1) GDP는 한 국가의 생산활동 및 경제성장을 측정한 경제지표로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등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GDP는 인구, 여가, 건강, 자연환경 등 인간의 웰빙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Ⅱ. 세대 간 경제: 국민이전계정 분석 결과

“국민계정을 연령별로 세분화한 국민이전계정”

- 국민이전계정은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 간 경제적 자원 배분 및 재배분 흐름을 나타내는 계량지표’이며, 인구 구조 변화 측면에서 현행 거시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발되었다. 여기에서는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경제를 설명한다.
-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 생산범위에 포함되는 연령별 경제적 자원 흐름 분포를 보여주는 통계로,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생애주기란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크게 유지되는 유년층 및 노년층 시기(생애주기적자)와 반대로 생산 능력이 소비보다 크게 유지되는 노동연령층 시기(생애주기흑자)로 구분되는 경제적 생애주기를 말한다. 즉 국민이전계정은 노동연령층의 잉여자원이 유년층 또는 노년층으로 대가 없이 이전되는 과정과 현재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자산이 재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분석틀이다.

[그림 2] 1인당 생애주기적자 및 경제적 자원 흐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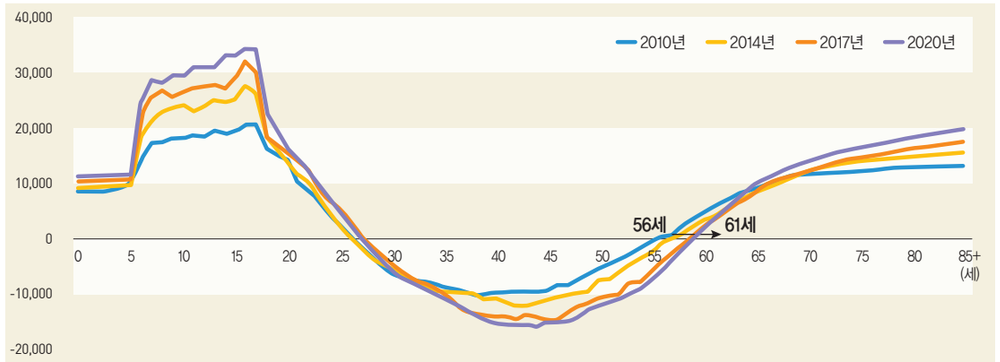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0년간 세대 간 경제 흐름”

- 2010~2020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한다. 인구 전체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총량 금액(10억 원)과 연령별 인구 효과를 제거한 1인당 금액(천 원)으로 세대 간 경제를 분석한다.
- 1인당 연령별 생애주기적자 그래프는 크게 3단계로 ① 노동소득이 없이 공공이전 및 민간이전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1차 적자구간’, ② 노동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구간’, ③ 노동소득이 점차 줄어 기초연금 등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이나 민간자산 재배분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2차 적자구간’이다.
- 국가 전체 규모에서 일반적으로 생애주기흑자가 아닌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데, 국민이전계정에서는 소비의 원천을 노동소득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노동소득 이외의 소득은 모두 이전 또는 재배분 개념으로 구분되어, 생애주기적자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연령재배분에서 설명한다.

[그림 3] 1인당 생애주기적자(2010~2020년)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 국민이전계정(각 연도).

[표 1] 생애주기 흑자/적자 진입 연령

(단위: 세)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흑자 진입 연령	27	27	27	27	27	27	27	28	27	28	27
적자 재진입 연령	56	57	57	56	58	58	59	59	59	60	61

자료: 통계청 국민이전계정(각 연도).

- 지난 10년간 흑자구간 진입연령은 27~28세로 큰 변동이 없으나, 2차 적자구간 진입연령은 2010년에 56세에서 2020년에 61세로 늦어지는 추세이다. 이는 법정 정년의 60세 의무화나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 지원 등 노년층 고용 촉진 지원 정책과 관련이 있다. 과거보다 건강 수준이 양호한 노년층은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며 길어진 기대여명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전체 생애주기적자 규모는 97조 5,000억 원으로 2010년 120조 7,000억 원보다 19.3% 감소하였다. 소비의 증가 폭보다 노동소득의 증가 폭이 커, 생애주기적자가 감소한 것이다. 유년층 생애주기적자는 2010년에 118조 9,000억 원에서 2020년에 141조 8,000억 원으로 19.3% 증가했으며, 노년층 생애주기적자는 같은 기간 62조 1,000억 원에서 122조 9,000억 원으로 97.8%가 증가하여 유년층보다 증가율이 높다. 생애주기적자를 구성하는 소비와 노동소득은 노년층에서 각각 2010년 대비 122.8%, 288.6% 증가하여, 노동연령층의 43.2%, 56.6%에 비해 높다. 즉 생애주기적자는 노동연령층에서 변화율(-177.5%)이 가장 크지만, 생애주기적자를 구성하는 소비와 노동소득을 살펴보면 노년층에서 변화가 가장 큰데, 이는 인구 구조 고령화와 관련이 있다.

[표 2] 연령계층별 생애주기적자 규모(총액, 명목)

(단위: 10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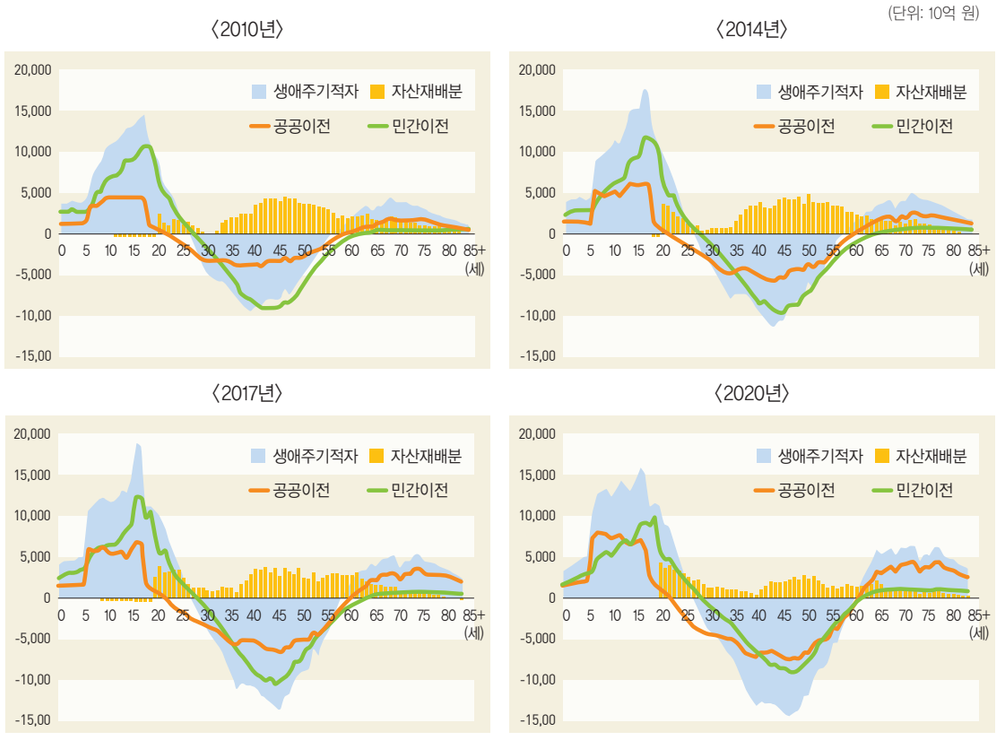
연령계층	구분	2010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0년 증감률 (2010년 대비)
전체	생애주기적자	120,712	133,586	118,157	97,470	-19.3
	소비	735,361	890,158	999,158	1,081,793	47.1
	노동소득	614,649	756,572	881,001	984,323	60.1
0~14세 (유년층)	생애주기적자	118,860	129,168	135,688	141,829	19.3
	소비	118,860	129,168	135,688	141,829	19.3
	노동소득	0	0	0	0	-
15~64세 (노동연령층)	생애주기적자	-60,250	-74,837	-112,120	-167,211	-177.5
	소비	545,050	663,704	742,057	780,777	43.2
	노동소득	605,299	738,541	854,177	947,989	56.6
65세 이상 (노년층)	생애주기적자	62,102	79,254	94,588	122,853	97.8
	소비	71,451	97,285	121,412	159,187	122.8
	노동소득	9,349	18,031	26,824	36,334	288.6

자료: 통계청 국민이전계정(각 연도).

-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연령재배분(공공 · 민간이전, 자산재배분)을 통해 충당된다. 공공이전은 복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기초연금, 무상교육 등)이며, 민간이전은 자녀 및 부모 생활비 지원 등 가족 내 사적거래(가구 내 · 가구 간)가 포함된다. 자산재배분은 노동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개인 자산에 대한 이자, 임대료 등이다. 즉 소비는 노동소득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 · 민간이전, 자산재배분으로 충당된다.
- 연령재배분 흐름을 살펴보면 노동소득이 거의 없는 유년층 적자는 주로 공공 · 민간이전으로 충당되고, 노년층 적자는 공공이전과 자산재배분(자산소득, 저축)으로 충당된다. 최근일수록 유년층과 노년층 생애주기적자를 충당하는 이전 중 공공이전 비중 확대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림 4] 연도별 연령별 총량 구성항목 비교(명목)

(단위: 10억 원)



자료: 통계청 국민이전계정(각 연도).

● 연령계층별 연령재배분 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에 120조 7,000억 원에서 2014년에 133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20년에는 97조 5,00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연령재배분은 생애주기적자를 충당하는 것으로 생애주기적자 규모와 동일하다. 부양주체인 노동연령층의 연령재배분은 음의 값으로, 2010년 대비 177.5%가 감소하여 부양 부담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년층의 경우, 공공이전은 2010년 대비 74.4%가 증가했으나, 민간이전은 16.2%가 감소해 공공의 유년층 부양 부담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공공(181.2%) · 민간(126.2%)이전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인구 구조 고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연령계층별 연령재배분 규모(총액, 명목)

(단위: 10억 원, %)

연령계층	구분	2010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0년 증감률 (2010년 대비)
전체	연령재배분	120,712	133,586	118,157	97,470	−19.3
	공공이전	0	0	0	0	−
	민간이전	−5,199	−3,380	−6,439	−3,157	39.3
	자산재배분	125,911	136,966	124,596	100,627	−20.1
0~14세 (유년층)	연령재배분	118,860	129,168	135,688	141,829	19.3
	공공이전	44,671	56,061	60,749	77,909	74.4
	민간이전	76,171	74,549	76,839	63,861	−16.2
	자산재배분	−1,982	−1,442	−1,900	59	103.0
15~64세 (노동연령층)	연령재배분	−60,250	−74,837	−112,120	−167,211	−177.5
	공공이전	−74,074	−101,981	−125,199	−160,584	−116.8
	민간이전	−91,503	−91,479	−97,563	−89,938	1.7
	자산재배분	105,328	118,623	110,642	83,311	−20.9
65세 이상 (노년층)	연령재배분	62,102	79,254	94,588	122,853	97.8
	공공이전	29,403	45,920	64,450	82,675	181.2
	민간이전	10,133	13,550	14,285	22,921	126.2
	자산재배분	22,565	19,785	15,853	17,258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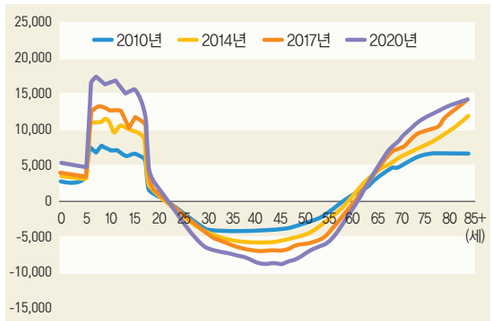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민이전계정(각 연도).

● 1인당 공공이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순유입 · 순유출 · 순유입이 차례로 발생하는 3단계 구조이다. 2010년 대비 공공이전 증가는 유년층의 경우 공공교육이전, 노년층의 경우 공공보건이전의 영향이 크다.

● 1인당 민간이전은 가구 내 · 가구 간 이전으로 구성되는데, 연령계층별로 지난 10년간 흐름상 큰 변동은 없어 생애주기적자 충당을 위해 공공제도(조세, 의무교육, 연금, 사회보험, 복지 등)를 통한 공공이전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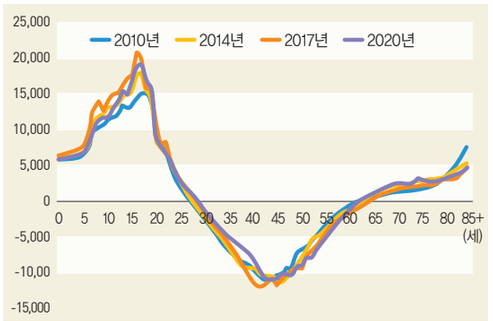
[그림 5] 1인당 공공이전

(단위: 천 원)



[그림 6] 1인당 민간이전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국민이전계정(각 연도).

"노년층 부양체계의 변화"

● 65세 이상 노년층 총량 기준 연령재배분의 구성비, 즉 부양체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공공이전의 경우 2010년에 47.3%에서 2014년에 57.9%, 2020년에는 67.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자산재배분은 2010년에 36.3%에서 2014년에 25.0%, 2020년에는 14.0%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민간이전은 2010년 대비 2020년 구성비 변화 폭이 2.4%p 정도로 크지 않다.

● 부양체계 구성비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이전의 증가, 자산재배분의 감소, 민간이전 증가 · 감소의 반복이다. 노년층의 민간이전 변화 추이는, 공공이전에 의한 노년층의 경제수준 향상이 민간이전의 유출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줄어들 여지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인구 구조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 변화 속에서 노년층의 삶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 재정정책 수립에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4] 65세 이상 노년층 부양체계 구성비

(단위: %)

연도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2010년	47.3	16.3	36.3
2011년	48.2	14.2	37.6
2012년	46.6	20.7	32.7
2013년	47.5	19.5	33.1
2014년	57.9	17.1	25.0
2015년	58.4	16.7	24.9
2016년	59.3	21.2	19.6
2017년	68.1	15.1	16.8
2018년	63.1	16.7	20.2
2019년	65.0	14.1	20.9
2020년	67.3	18.7	14.0

자료: 통계청 국민이전계정(각 연도).

Ⅲ. 세대 간 경제 이해의 중요성

“정부 재정 정책의 증거기반 제공”

- 인구 구조 고령화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국가가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정부의 정책도 고령사회 ‘대응’에서 ‘적응’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인구 구조 고령화를 정확하게 진단 및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 높은 자료가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는 고령화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민이전계정을 사용한다.
-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공공이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고 세대간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정책 개선 과정에서 정책의 영향력 혹은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전계정이 이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이자 분석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민이전계정은 통계청에서 공표한 자료로, 2010~2020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함.
  –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